

# '92년 석유정책 방향



李 元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

## 1. 머리말

석유를 단순히 에너지원의 일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시각인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2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와 걸프사태등을 통해 석유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체

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우리의 석유정책은 에너지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동시에, 경제정책상 중요부문의 하나로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92년 석유정책도 '92년 경제정책에 맞추어 그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92년 경제정책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면은, 건전한 안정성장과 국제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작년에 97억\$에 달했던 국제수지적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출증대와 수입수요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따라, 작년도 수입액이 125억\$에 달하여 총수입액중 15.3%의 높은비중을 차지했던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요인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것을 중점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작년 수입액이 101.7억달러에 달하였던 석유의 소비절감정책이 '92년도 최대의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92년 석유정책은 석유소비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장단기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다.

## 2.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

### (1) 국제에너지 환경

'92 국제에너지 환경전망은 국제석유시장의 안정, 환경규제 강화, 북방 및 해저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92년 국제석유시장을 전망해보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2~3%) 전망에 따라 세계 석유수요도 연 1.5% 내외(1~1.2백만 B/D)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한편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공급재개로 공급도 증가(1~2백만 B/D)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2 국제 원유가는 돌발적 사태가 없는 한 다소 공급우위의 안정기조를 반영하여 걸프사태 이전상태(16~17\$/B)로 환원되어 당분간 약세를 보이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사용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계기후협약 체결('92.6 목표) 가능성을 가시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LNG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 (2) 국내 에너지환경

한편 국내 에너지소비증가율은 '89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전기·천연가스·석유 등 고급에너지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에너지 수입액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1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국제수지에 큰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2년 우리나라 석유수요는 18.6% 증가한 약 5.03억배럴에 이를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석유의 준도는 전년도의 58.6%에서 더욱 높아져 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1.8%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가스수요는 그 증가율이 더욱 높아져서 전년대비 27.4% 증가한 약 8백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석유수요관리를 강력히 추진하여 내수용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증가율을 10~12% 수준으로 억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3) '92 에너지정책과 석유정책

무엇보다도 '92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소비 10%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의 최대수요관리와 석유류 수입정책도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환경규제 강화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석유·석탄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천연가스보급 및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며 대체에너지개발 등 미래 신에너지개발에 장기적인 주안점을 두고 에너지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의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 및 에너지소비증가 추세에 대응한 공급능력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석유부문에서는 비축시설 확대, 송유관 건설, 천연가스 전국공급망 건설등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의 안정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석유부문은 2001년까지는 총수입의 10%를 개발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

## 3. '92년 석유정책 방향

### (1) 석유산업의 경영정상화

걸프사태 기간동안 발생한 정유사 손실 중 일부에 대한 보전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데다, '91년에도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정유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신규투자 및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자금사정까지 악화되어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올해에는 국제원유가가 당분간 약세로 지속되어 2월 부터 기금정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기금정수를 유예하여 정유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정유사들의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유사들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석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2) 석유산업의 경쟁촉진

우리나라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석유산업의 자율화 개방화는 '92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저 전면적인 유가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경유 B-C유등의 유가자유화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유가자유화의 전면 실시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유가자유화의 전면추진은 국제원유가격 인하추세와 정유사 손실보전 진행을 보아 그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국내유가 구조를 국제수준으로 접근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자유화된 휘발유 및 등유의 가격경쟁 허용폭을 현행 3%에서 5%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인데 이는 주유소 상표표시제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그리고 정유사간 경쟁의 결과가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상표표시제를 '92. 4. 1부터 시행키로 이미 예시하였으며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는 예정대로 '93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 (3) 석유가격수준의 적정화

'88년 이후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을 6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현재의 국내석유 가격은 '88년대비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석유가격의 인하는 물가안정과 국내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반면 석유소비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석유소비 절감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92년에는 석유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격인하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석유소비억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휘발유·등유등 소비성 유종의 소비자가격 인하는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최근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석유가격의 전면자유화와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국내 유가구조를 국제유가구조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국제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저가인 경유가격 조정을 통해 휘발유/경유, 경유/B-C유간 가격격차를 조정하고, 둘째로, 국내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한 탈황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 가격격차를 현재 유행 1%당 가격차 0.89\$/B에서 국제수준인 1.50\$/B 이상에 근접하도록 더욱 격차를 벌리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여겨진다.

### (4) 석유수요관리 강화

'92년 석유정책의 중점은 강력한 석유소비절감 정책에 의해 내수용 석유수입 증가율을 예상증가율 18.6%에서 10~12%로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연비향상과 공공기관 차량운행 10부제 실시등 수송부문 석유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납·관공서 등 공공부문의 석유소비 10% 절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시설 과잉증설에 따른 과당 경쟁 문제를 고려하여 나프타수요를 경제성장률 수준인 8% 정도로 억제할 것을 검토중이며, 아스팔트 공급량을 정유사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공급케 함으로써 과도한 아스팔트 수입사용을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반기 석유수요 절감계획의 추진결과를 보아 가면서 하반기에는 금년도 석유수급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예정이다.

### (5) 석유·가스 비축능력의 확대

석유·가스의 수요전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상시 안정공급을 위한 일정규모의 석유·가스 비축은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인데 최근 국내소비의 급증으로 비축수축일수가 계속 저하하고 있어 비축능력의 보강이 긴급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96년까지 정부비축 60일분, 민간비축 30일분, \*합계 90일분(IEA 권고수준)의 석유비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인데 현재 7개 석유비축기지를 건설중에 있으며, 그간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온 민간석유비축은 '9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비축시설 건설과 비축유 구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자금을 계속해서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이 크므로 비축유의 경제적인 운용이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경제 불안 및 석유수급 불안시마다 정부비축유를 활용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상당한 외화절감 효과도 거두어 왔는데, '92년에는 이와같은 효율적 운용방안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축사업의 관리체제를 전문화하고 관련기술을 개발하는등 비축의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인 제도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산유국과의 외교적인 면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기로 한다.

(6) 가스의 안정공급기반 확충

가. LNG

에너지수요의 고급화에 따라 LNG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의 추가 소요물량 확보가 문제된다. '93~'95 소요물량은 SPOT 구매로 경제적 도입을 추진하고 '96년 이후 소요물량은 장기도입계약으로 안정공급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도입선 다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수요를 연중평준화하고 여름철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가스냉방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피크수요시 대수요처를 중심으로한 수요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LPG 가격상승으로 지역간 도시가스가격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도시가스를 LNG로 조속히 전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92년에 3,9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가격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도시가스회사의 회계기준을 통일한 회계준칙을 제정할 예정이며, 가스도매가격에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여 도시가스가격의 지역간 격차축소 및 전국공급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LPG

LPG는 우선 장기안정 도입선 확보를 위해 사우디 장기계약물량을 연간 1,770천톤에서 2,570천톤으로 800천톤 증량확보 하고, 걸프사태로 도입이 중단된 쿠웨이트 계약물량(연간 400천톤)의 도입을 재개하며 中東 이외로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 및 안정성면에서 적절치 못한 LPG 사용보일러 설치는 억제하고, 가정연료로 프로판 대신 부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탄 수요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합리적인 수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가스용 프로판 가격은 수입원가(189,685원/톤)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 LNG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소세를 폐지토록 추진하여 공급예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인근지역에 신규 수입기지(약 160천톤 규모) 건설로 공급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7)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향후 석유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국내대륙붕 탐사는 2000년대초까지 경제규모의 석유부존 여부 확인을 완료하며 둘째로 해외석유개발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국내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외국회사와 공동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70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대륙붕 탐사결과는 시추탐사 26개공중 9개공에서 석유 또는 가스징후가 있었으나 경제규모의 석유를 발견하지는 못한 실정이나 그동안의 탐사성과로서 석유부존유망구조 149개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는 국내대륙붕탐사에 외국석유회사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하여 현재 조광권만 인정하는 것에서 생산분배계약을 인정함으로써 로얄티 및 세금징수 위주에서 비용회수가 우선 가능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은 '91년말 현재 14개국 19개 사업을 추진중인데 '92년도에 10개사업을 신규추진하여 개발원유도입이 현재 1.6%에서 2001년 1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사업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채무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소요자금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8) 저공해 석유류 공급 확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도시의 아황산가스(SO<sub>2</sub>) 오염도를 국제환경기준치인 0.05ppm 이하로 감소시킬수 있도록 연료유의 저유황화를 198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휘발유의 무연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92년에는 저유황연료유의 공급비율을 경유는 '91년 81.8%에서 85.9%로, B-C유는 '91년 70.1%에서 73.6%로 증대시킬 방침이며 무연휘발유의 공급비율은 '91년 74.7%에서 83.7%로 증대시킬 계획이고 저공해 연료유의 공급지역도 '91년의 24개시 7개군에서 '92년에는 26개

시 8개군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도 석유품질 검사소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4. 맺는말

최근 세계적으로 저유가·저달러·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신 3저현상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86~'88년간의 3저현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우리경제에 미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부문만을 볼 때 현재의 국제유가가 약

세임에는 틀림없으나 '86~'88년과 같이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큰 폭의 유가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유가가 약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92년 국내석유소비가 총량으로는 두자리 숫자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제수지에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석유소비절감정책의 장기목표는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을 줄이는데 두어져야 한다. 올해에도 석유의존도는 5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석유의존도가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경제동향〉

#### 유럽경제지역(EEA) 창설

(European Economic Area)

인구 3억8천만명, GDP(국민총생산) 5조5천억달러에 이르는 EC(유럽공동체, 12개국)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은 「지중해에서 북극」까지라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 창설에 합의했다. 현재 EFTA의 7개국들은 전체 교역량의 60%를 EC에 의존하고 있으며 EC또한 EFTA에 25%의 교역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전체 교역량의 40%에 달하는 것이다.

EEA 창설은 그동안 현안이 되어왔던 북해연안의 어로문제, EC내빈국들에 대한 EFTA부국들의 차관 제공(24억달러), 알프스산악지대로의 트럭수송문제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온 그리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등 이해당사국들이 협정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함으로써 이루어 졌는데, 이로써 EC와 EFTA는 1993년 1월부터 동일시장의 상품, 서비스, 자본이동을 자유화 한다.

#### 채권보상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으로 보상비를 수령할 때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토지소유자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다.

토지채권은 상환기한이 3~5년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입찰보증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되는데, 양도세 감면폭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현금수령이 50%, 채권수령은 80%로 차등을 두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보상비를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현금수령 시에는 70%만 감면하는데, 정부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채권발행은 금지하고 국채로 발행할 때에도 대상사업을 도로, 항만, 공단등 사회간접시설에 국한시키기로 했다.